

정부, 금융세제 개편 본격 착수... 쟁점은?

1 양도세 기준 낮추나 2 거래세 전면폐지 이중과세 불식?

내달 7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증권거래세율 0.1% 포인트 인하 양도세 기준선 2천만원 의견 갈려

정부가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2년 간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대한 인하폭 조정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만든 것이 핵심이다. 해당 소득의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2023년에 증권거래세는 0.15%가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2020년	증권거래세: 0.25%	2022년	0.23%	2023년	0.15%
펀드(집합투자기부)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등 소득 원천별 과세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탄력세율 10% 적용. 국내외 파생상품 합산해 250만원 기본공제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개인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금융투자소득 과세 적용 세율	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	
기본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	국내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

연립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한 기본공제(2000만원)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폭(0.1%포인트)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며 "다만 대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금융투자소득과세 기준과 증권

거래세율 인하폭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거두면서 증권거래세까지 수취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가 있던 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은 더욱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탄력세율 적용과 면제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투자자의 대부분(95%)은 주식양도세와 무관하게 인화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지금보다 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를 두고 소액투자자 과세 부담을 배려해 예상보다 기본공제액이 높게 설정됐다는 평가와 함께 공제액이 과도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

다. 해외주식은 면세 기준을 양도차익 250만원으로 했는데 국내 주식은 2000만원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고, 주식으로 2000만원까지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므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기준선 달라지나
이에 따라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되는 세수 규모는 수 천 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기본공제액을 꼭 2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확립된 이론은 없고 일부 선진국은 모든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라 일단 2000만원 안을 제시했는데, 세법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런 부분은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액주주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설정한 양도소득세율(20%)에서 더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 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항공 빅딜, 결국 노딜... 플랜B에 촉각

아시아나, 플랜B로 '분리매각' 전망 이스타, 차선책으로 정부 지원 받고 새 인수 대상자 찾기 고려할 듯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국내 항공업계의 '빅딜'이 사실상 상반기에 무산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생존을 위해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종결 시한을 넘기면서 하반기까지 M&A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 종결 시한은 각각 이달 27, 29일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불협화음이 생기며 인수를 위한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되게 됐지만, 이마저도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은 상황이라 불투명한 상태다.

양사는 인수 종결 시한에 다다랐지만, 외려 불협화음만 더 커지고 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최근 늘어난 부채를 두고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계약 이전 대비 아시아나항

공의 부채가 4조5000억원 증가하며, 인수를 결정한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말이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들의 급여를 40%만 지급한 이후 '무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체불 임금만 25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측은 체불임금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오너일가에 대한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100억원가량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금을 구한 경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상직 의원의 자녀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와 아들이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 확보하고 있어 불법 승계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한

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사는 생존을 위해 '플랜B'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측에서 고집했던 '통매각'이 아닌 '분리매각'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당초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등 계열사까지 한 번에 매각하는 것을 원했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매각을 위해 차선책을 택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스타항공도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일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먼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는 곳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업황이 정상화됐을 때, '새 주인'을 찾는 전략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기준 부채만 2074억원에 달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파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셋다운'으로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돼 재운항에도 최소 약 3주가 걸릴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휘발유값 5주 연속 상승

전국 휘발유값이 이달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며 5주 연속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당 16.3원 오른 1346.3원이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알뜰주유소. /연합뉴스

“수출주와 내수주 등 다양하게 보유해야”

▶▶ 1면 '넘치는 유동성'서 계속

◆순환매 장세, 상승 이어갈 업종은?

코스피 지수는 이달 초보다 3.36% 상승하는 데 그쳤다. 7.08% 상승했던 지난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3월 19일(428.35) 대비 75% 치솟았던 코스닥도 같은 기간 2.01% 상승하며 오름세가 더뎠다.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다.

증시가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전보다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분

명해 보인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승 여력이 지금처럼 줄어든 시기에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대상물의 범위를 넓혀 가치형과 성장형, 내수주와 수출주, 방어주와 민감주 등 상호 대척점에 있는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고르게 포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짧은 기간 안에 주도주 색채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존 주도주 시각을 유지하라는 분석도 있다.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종목들이

/송태화 기자 avin@